

- 최종보고서 -

지방자치제도 30주년 평가

2025. 9.

제 출 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 30주년 평가」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사단법인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장 김 종 남

지방자치제도 30주년 평가

연구책임

민병기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소장(정치학 박사)

공동연구진

이재현 배재대학교 교수(정치학 박사)
김정동 (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 부소장

차 례

1장 조사개요

1. 조사명칭	3
2. 조사목적	3
3. 조사설계	3
4. 조사방법 및 내용	3
5. 조사절차	5
6. 응답결과	6

2장 지방자치 30주년 시민설문조사 결과

1. 일반 현황	9
1) 거주기간	9
2) 현재 거주지역	9
3) 성별	10
4) 연령	10
5) 최종학력	11
6) 월평균 수입	11
7) 가구 자산규모	12
8) 가구 구성원	12
9) 정치성향	13
2. 지방자치제도 30주년에 대한 평가	14
1) 지방자치 30년 종합평가	14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심도	14
3)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만족도	15
4)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	16
5)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여부	16
6) 지방자치제 시행 후 성과평가	17
7) 지방자치제 시행 후 기여도 평가	18
(1) 본인 개인의 삶	18
(2) 지방자치분권	18

(3) 지역균형발전	19
(4) 한국민주주의	20
■ 지방자치제 기여도 평가 분석	20
3.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	21
1)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인지도	21
(1) 주민참여예산제	21
(2) 주민조례 발안제도	21
(3) 주민감사제도	22
(4) 주민자치회	22
2)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23
3) 활성화되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	24
■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에 관한 의견 분석	24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25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분석	25
4. 시민사회단체 평가와 공동체 인식	26
1)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26
2)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의견	26
3)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지역사회 기여도	27
4) 공동체 의식 조사	28
(1) 대전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	28
(2) 대전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의견	28
(3) 대전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위기 대응)에 관한 의견	29
5)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우선순위(2개까지 응답)	29
6)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30
7) 대전지역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30
8)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수용도	31
9) 대전지역 주체간 갈등에 대한 의견	31
10)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구청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32
5. 대전시민 집단별 인식의 차이	33
1) 자치구 거주지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33

2)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35
3)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36
4)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	37
5)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38
6)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	39
■ 부록.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설문	41

〈표 차례〉

표 1 조사내용	4
표 2 실사진행	6
표 3 지방자치제 시행 후 5개 분야 성과평가	17
표 4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인식	23
표 5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25
표 6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26
표 7 대전지역 주체간 갈등에 대한 의견	32
표 8 자치구 거주지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33
표 9 지방자치제 참여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35
표 10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36
표 11 대전시민의 공동체소속감과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	37
표 12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38
표 13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의 관계	39

〈그림 차례〉

그림 1 응답자 거주기간	9
그림 2 현재 거주지역	9
그림 3 성별	10
그림 4 연령	10
그림 5 최종학력	11
그림 6 월평균 수입	11
그림 7 가구 자산규모	12
그림 8 가구 구성원	12
그림 9 정치성향	13
그림 10 지방자치 30년 종합평가	14
그림 11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심도	15
그림 1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만족도	15
그림 13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	16
그림 14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관한 의견	17
그림 15 지방자치제도가 본인 개인의 삶에 기여도 평가	18
그림 16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분권에 기여도 평가	19

그림 17 지방자치제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도 평가	19
그림 18 지방자치제도가 한국민주주의에 기여도 평가	20
그림 19 주민참여예산제 인지 및 참여경험	21
그림 20 주민조례발안제도 인지 및 참여경험	21
그림 21 주민감사제도 인지 및 참여경험	22
그림 22 주민지차회 인지 및 참여경험	22
그림 23 활성화 되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	24
그림 24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주민 의견수렴 정도	27
그림 25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지역사회 기여도	27
그림 26 대전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	28
그림 27 대전시민간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의견	28
그림 28 대전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위기대응)에 관한 의견	29
그림 29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우선순위(2개까지 응답)	29
그림 30 한국사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30
그림 31 대전지역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30
그림 32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견 ·	31
그림 33 지방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32
그림 34 자치구 거주자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34

설문분석 요약

1. 응답자 일반 현황

- ☑ 거주기간: 30년 이상 거주자가 51.5% → 대전 정주 기반이 매우 안정적임
- ☑ 거주지역: 서구(34.6%)와 유성구(25.2%) 비중이 높음
- ☑ 연령: 40대(23.4%), 50대(22.0%), 60대(21.5%) 중심
- ☑ 정치성향: 중도 39.8%, 진보 38.6%, 보수 21.6% → 균형적 분포

2. 지방자치 30년 평가

- ☑ 종합평가: 긍정 42.6%, 보통 40.8%, 부정 16.4%.
→ 대전시민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 다만 '보통' 응답이 많아 체감 부족 시사
- ☑ 관심도: 관심 있음 47.0%, 보통 37.4%
- ☑ 만족도: 만족 34.3%, 보통 48.1%, 불만족 22.6%
→ 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개인적 체감효과는 미흡
- ☑ 지방분권 강화 의견: 찬성 59.1%, 보통 31.2%, 반대 9.8%
- ☑ 지방정부 역할 강화 인식: 강화 45.3%, 변화 없음 41.1%, 약화 12.7%

3. 분야별 성과평가 (10점 만점 평균)

- ☑ 생활환경·도시관리 6.21
- ☑ 교육·문화·여가 6.20
- ☑ 보건복지 6.11
- ☑ 주민자치·참여역량 5.78
- ☑ 지역경제·일자리 5.75
- ☑ 종합평균: 6.01점
→ 제도적 기반은 있으나 경제·참여 분야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음

4. 지방자치제 기여도 인식

- ☑ 민주주의 발전 기여: 긍정 43.0% → 풀뿌리 민주주의 효과 인정
- ☑ 지역균형발전·분권 기여: 보통(45~50%) 응답 다수 → 제도 효과 한계 지적
- ☑ 개인 삶 기여: 긍정 29.4%, 보통 48.3% → 효능감 부족

5. 주민참여제도 인식

- ☑ 인지도 높음: 주민자치회(81.9%), 주민참여예산제(77.7%)
- ☑ 참여경험 낮음: 모두 한 자릿수(6~12%)
- ☑ 정책영향력 인식: 주민자치회(5.79점), 주민참여예산제(5.73점)
- ☑ 활성화 필요 제도: 주민감사제(32.0%) 최우선
- ☑ 의견 수렴 평가: 자치구(2.83점)가 가장 높음, 광역 단위는 낮음

6. 시민사회와 공동체

- ☑ 신뢰도: 시민사회(NGO 2.69점)가 시청(2.62), 시의회(2.55)보다 높음
- ☑ 시민사회 기여도: 긍정보다 갈등 유발 응답이 더 높음(31%)
- ☑ 공동체 소속감: 긍정 33.8%, 보통 41.0%, 부정 25.2%
- ☑ 정치 양극화 인식: 한국사회 71.2% 심각, 대전지역 56.9% 심각
- ☑ 주체 간 갈등: 단체장 vs 시민사회(6.14점), 단체장 vs 의회(6.08점) → 권한 집중에 따른 갈등 심각
- ☑ 선출직 평가 기준: 청렴성·도덕성(36.9%), 정책공약비전(34.8%)이 최우선

7. 상관분석 주요 결과

- ☑ 주민자치 참여 경험 ↔ 주민자치역량($r=0.253$) / 지역경제 일자리와 강한 상관($r=0.726$)
- ☑ 공동체 소속감 ↔ 성과평가
- ☑ 생활환경·도시관리($r=0.468$, $p<0.01$)와 가장 높은 상관
- ☑ 이어서 지역경제·일자리($r=0.387$), 교육·문화·여가($r=0.445$), 보건복지($r=0.445$), 주민자치참여역량($r=0.447$), 지방자치 30년 평가($r=0.424$)와도 유의한 상관
 - 공동체 소속감이 강할수록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적 기반 강화에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
- ☑ 공동체 소속감 ↔ 제도 참여 경험
- ☑ 주민자치제도 참여 경험과도 유의한 상관($r=0.342$, $p<0.01$)
 -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시민일수록 제도 참여 경험도 많아, 제도와 공동체 인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함
- ☑ 시민사회 신뢰 ↔ 지역경제 일자리($r=0.392$), 지방자치 30년 총평가($r=0.387$)

- ☑ 시민사회 신뢰 ↔ 주민자치 참여 경험($r=0.225$)
- 경제성과·주민자치 역량·시민사회 신뢰가 지방자치 성과의 3대 핵심 축

8. 종합적 시사점

■ 체감형 지방자치 강화 필요

- ☑ 관심과 긍정적 평가는 있으나 개인 삶의 효능감은 낮음 → 주민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제도적 장치 강화 필요.

■ 경제성과와 주민참여 연계

- ☑ 주민참여역량이 지역경제 성과와 밀접히 연결됨 → “참여-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이 핵심

■ 시민사회 신뢰 기반 회복

- ☑ 시민사회 신뢰가 경제성과와 제도평가에 영향을 미침 → 행정·의회와 시민사회의 협치 구조 제도화 필요

■ 정치양극화 완화와 합의 문화 정착

- ☑ 대전은 전국 대비 양극화 인식이 낮음 → 중도 성향 다수와 개방적 태도 (정치적 입장 수용도 43.9%)를 기반으로 “지역통합 모델” 구축 가능

■ 지방정부-의회-시민사회 갈등 조정 장치 마련

- ☑ 단체장 권한 집중으로 갈등이 심각 → 견제와 균형 기능 강화 및 제도적 협치기구 필요

■ 공동체 기반 재구성

- ☑ 주민들은 주거단지·동 단위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며, 온라인 공동체 영향도 확대됨 → 지방자치는 생활 단위 공동체와 디지털 커뮤니티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 ☑ 공동체 소속감은 단순한 정서적 유대가 아니라 지방자치 성과평가와 직접 연결됨
- ☑ 특히 생활환경과 경제적 조건이 공동체 유대의 기반이 되며, 이는 다시 주민참여 활성화로 이어짐
- ☑ 따라서 지방자치는 “생활환경 개선 + 경제적 뒷받침 + 공동체 기반 참여 확산”이라는 3중 구조를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야 함

1장

조사 개요

1. 조사명칭
2. 조사목적
3. 조사설계
4. 조사방법 및 내용
5. 조사절차
6. 응답결과

1. 조사명칭

: 지방자치제도 30주년에 대한 평가

2. 조사목적

○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30년이 흐르는 동안, 대전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의회·행정에 목소리를 내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쌓음. 그러나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결정 구조, 주민 참여예산 축소, 일방적 행정 등으로 시민들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음

○ 지난 30년간 시민들은 마을 활동, 예산감시, 의회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발전시켜 왔지만, 그 성과가 공식적으로 기록·평가되지 못하거나 일부만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음. 동시에,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한계(행정 불투명, 의원 전문성 부족, 참여 기회 제한)는 단순히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미래 과제를 구체화함

○ 30년 지방자치의 역사·시민 역할·현재 한계·미래 과제를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이 만들어온 자치 경험을 자긍심으로 재조명하고, 동시에 오늘날 드러난 문제들을 데이터와 생생한 증언으로 정리하여 지속 가능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함

3. 조사설계

- 1) 모집단 : 대전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남, 여
- 2) 조사기간 : 2025년 5월 2일 ~ 9월 28일(150일)
- 3) 표본크기 : 615개
- 4) 표본추출방법 : 성, 연령, 지역 비례할당 추출

4. 조사방법 및 내용

1) 조사방법 : 모바일 웹조사

2) 조사내용

- 지방자치 30주년에 대한 평가

표 2 조사내용

구분	문항 정보	비고	
일반적 특성	1 거주기간	주관식 숫자	
	2 거주지역	객관식 단일	
	3 성별	객관식 단일	
	4 출생년도	주관식 단일	
	5 가구 월평균 수입	객관식 단일	
	6 가구 총자산	객관식 단일	
	7 가구 구성원	객관식 단일	
	8 정치적 성향	객관식 척도	
지방자치제 30주년 평가	9 지방자치 30년 종합점수	객관식 척도	
	10 지방자치제 관심도	객관식 척도	
	11 지방자치제 만족도	객관식 척도	
	12 지방분권 강화 인식	객관식 척도	
	13 지방정부 역할 강화 정도	객관식 척도	
	14 지방자치제 30년 성과	- 복지 및 보건서비스	객관식 척도
		- 생활환경 및 도시관리	객관식 척도
		- 교육·문화·여가	객관식 척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객관식 척도
		-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객관식 척도
	15 지방자치제의 분야별 기여 정도	- 본인 개인의 삶	객관식 척도
		- 지방자치분권	객관식 척도
		- 지역균형발전	객관식 척도
		- 한국의 민주주의	객관식 척도
참여제도와 주민자치	16 주민참여제도 인지 정도	- 주민참여예산제	객관식 척도
		- 주민조례발안제도	객관식 척도
		- 주민감사제도	객관식 척도
		- 주민자치회	객관식 척도
	17 주민참여제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주민참여예산제	객관식 척도
		- 주민조례발안제	객관식 척도
		- 주민감사제	객관식 척도
		- 주민자치회	객관식 척도

시민사회 단체 평가와 공동체 인식	18	활성화되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	객관식 단일
	19	기관별 주민의견반영도	
		- 대전광역시청	객관식 척도
		- 대전광역의회	객관식 척도
		- 자치구청	객관식 척도
		- 자치구의회	객관식 척도
	20	기관별 신뢰도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객관식 척도
		- 대전광역시청	객관식 척도
		- 대전광역시의회	객관식 척도
	21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의견 반영도	객관식 척도
	22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갈등유발	객관식 척도
	23	대전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	객관식 척도
		대전시민 간 연대와 협력	객관식 척도
		대전지역 공동체의 회복력	객관식 척도
	24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객관식 중복
	25	한국사회 정치적 양극화 정도	객관식 척도
	26	대전지역 정치적 양극화 정도	객관식 척도
	27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도	객관식 척도
28	주체간 갈등		
	- 자치단체장 vs. 지방의회	객관식 척도	
	- 자치단체장 vs 시민사회	객관식 척도	
	- 지방의회 vs 시민사회	객관식 척도	
	- 시민사회 내	객관식 척도	
29	지방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	객관식 단일	

5. 조사절차

1) 문항설계

- 기간 : 2025년 5월 2일 ~ 7월 1일
- 조사설계 : 조사대상 선정, 표본설계
- 설문지 작성 : 설문지 작성 및 발주처 확인을 통한 확정

2) 실사 준비, 실사 및 분석

- 기간 : 2025년 7월 2일 ~ 7월 7일
- 실사준비 : 설문지 테스트

- 실사진행

표 3 실사진행

구분	실사일정	소요기간
	2025년 7월 4일 ~ 7월 7일	4일

3) 조사통계 분석

- 기간 : 2025년 7월 8일 ~ 8월 19일

4) 보고서 작성 및 최종 납품

- 기간 : 2025년 8월 20일 ~ 9월 28일
- 보고서 작성 : 빈도 및 교차분석 테이블 및 그래프 작성, 결과 분석 작성, 발주처 개선의견 제시
- 최종 산출물 납품

6. 응답결과

- 조사성공 : 615명(성공률 30.8%)
- 표본오차 : 95%신뢰수준에서 $\pm 3.95\%$

2장

지방자치 30년 시민설문조사 결과

1. 일반적 특성
2. 지방자치제 30주년 평가
3. 참여제도와 주민자치
4. 시민사회단체 평가와 공동체 인식
5. 대전시민 집단별 인식의 차이

1. 일반 현황

1) 거주기간

□ 응답자의 거주기간은 0~4년 8.5%, 5~9년 5.3%, 10~14년 6.5%, 15~19년 3.7%, 20~24년 13.5%, 25~29년 10.4%, 30년 이상 51.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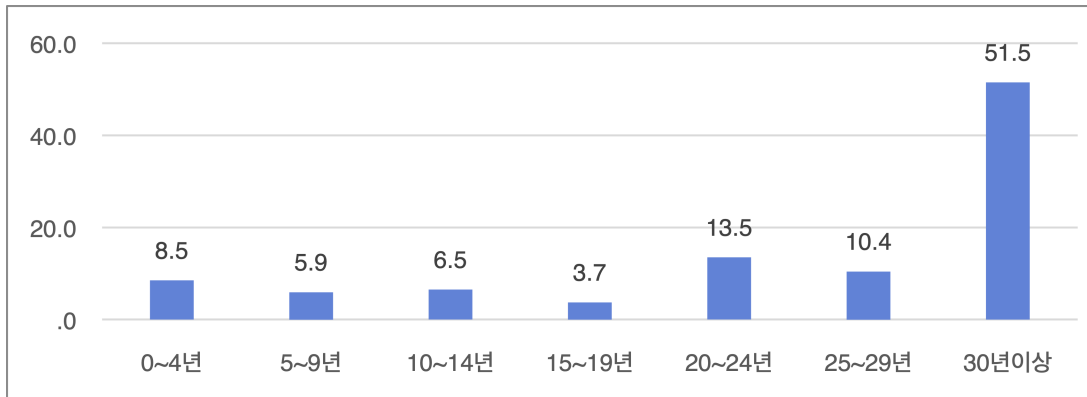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거주기간

2) 현재 거주지역

□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역은 동구 13.3%, 중구 16.1%, 서구 34.6%, 유성구 25.2%, 대덕구 10.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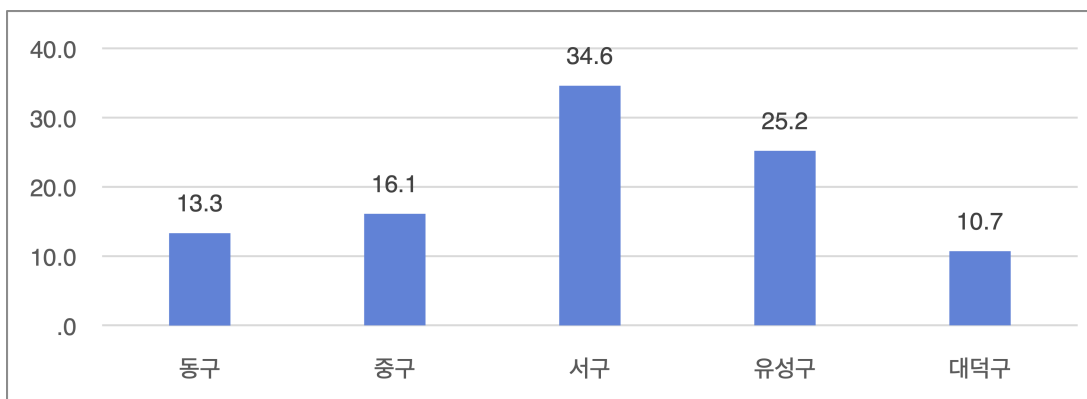


그림 2 현재 거주지역

3)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52.0%, 여성 48.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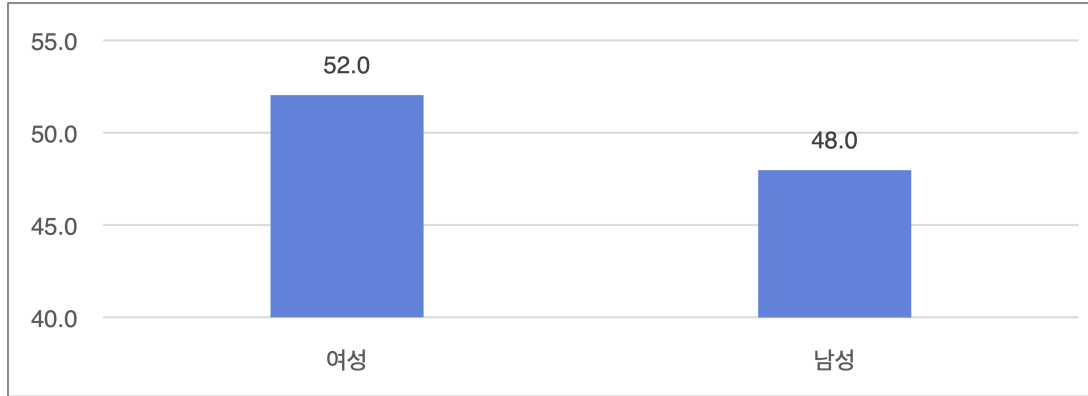


그림 3 성별

4) 연령

□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13.5%, 30대 16.9%, 40대 23.4%, 50대 22.0%, 60대 21.5%, 70대 이상 2.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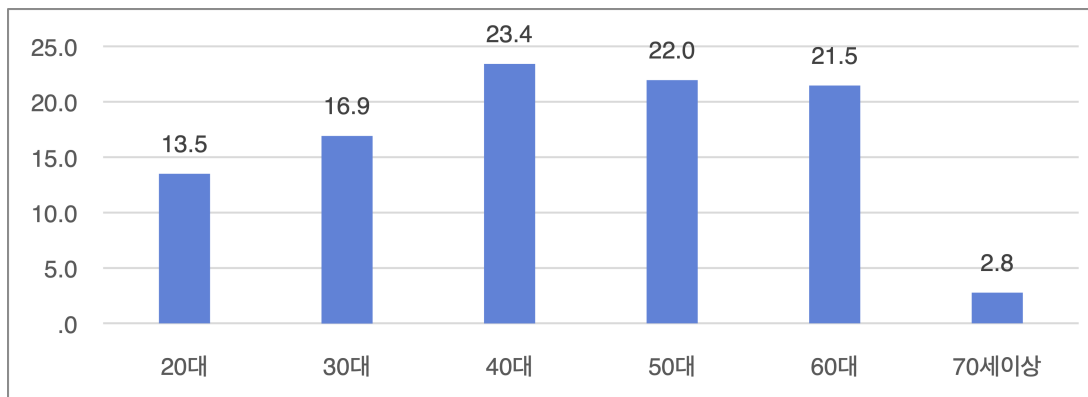


그림 4 연령

5) 최종학력

-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초등학교 1.3%, 중학교 1.5%, 고등학교 27.5%, 대학교 57.1%, 대학원 12.7%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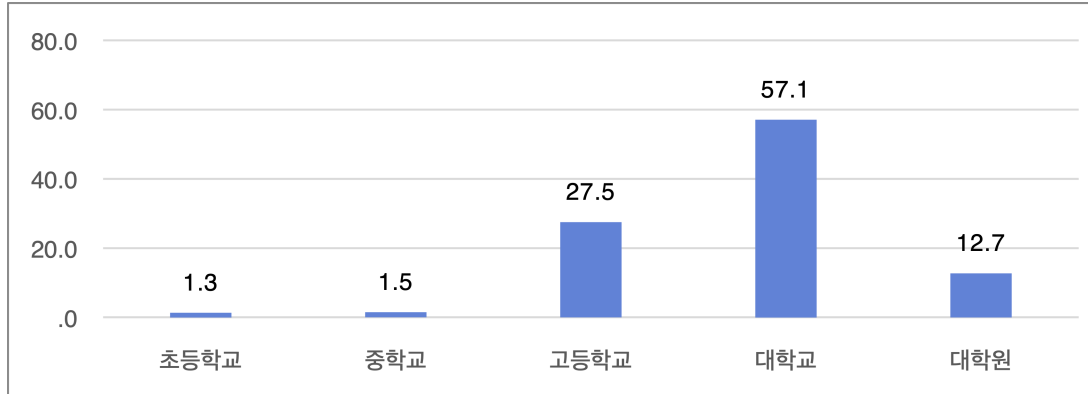


그림 5 최종학력

6) 월평균 수입

- 응답자의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 7.6%, 100~199만원 7.3%, 200~299만원 17.9%, 300~399만원 17.9%, 400~499만원 15.9%, 500~599만원 9.6%, 600~699만원 9.1%, 700만원 이상 14.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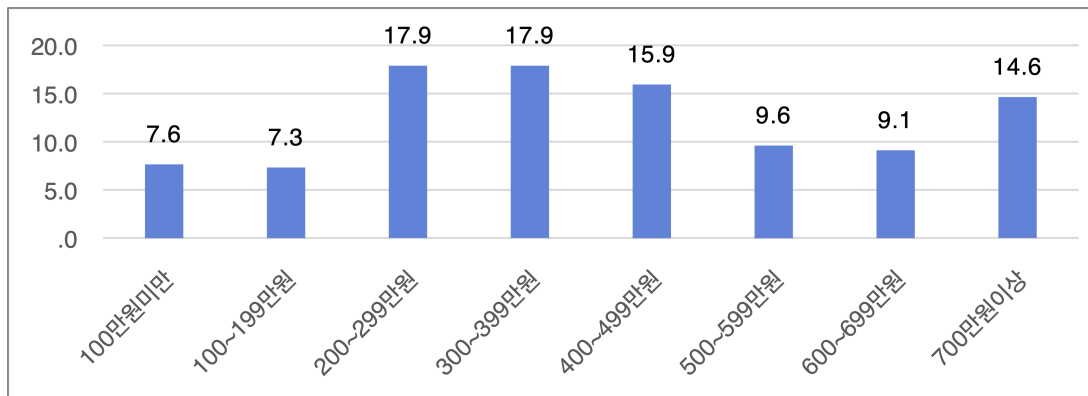


그림 6 월평균 수입

7) 가구 자산규모

- 응답자의 가구 자산규모는 5천만 원 미만: 21.8% 5천만~1억 10.6%, 1억~3억 25.2%, 3억~5억 19.5%, 5억~7억 10.6%, 7억~9억 4.4%, 9억 이상 8.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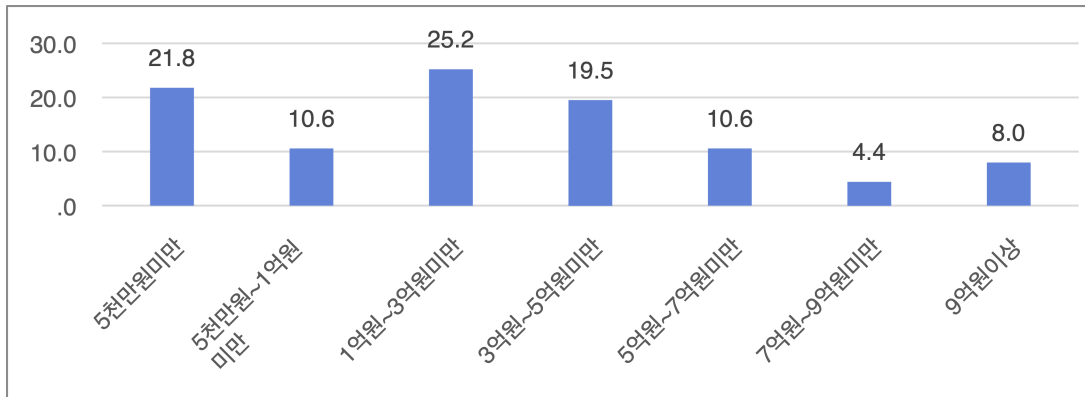


그림 7 가구 자산규모

8) 가구 구성원

- 응답자의 가구 구성원은 1인 가구 19.5%, 2인 가구 24.9%, 3인 가구 23.1%, 4인 가구 24.9%, 5인 이상 7.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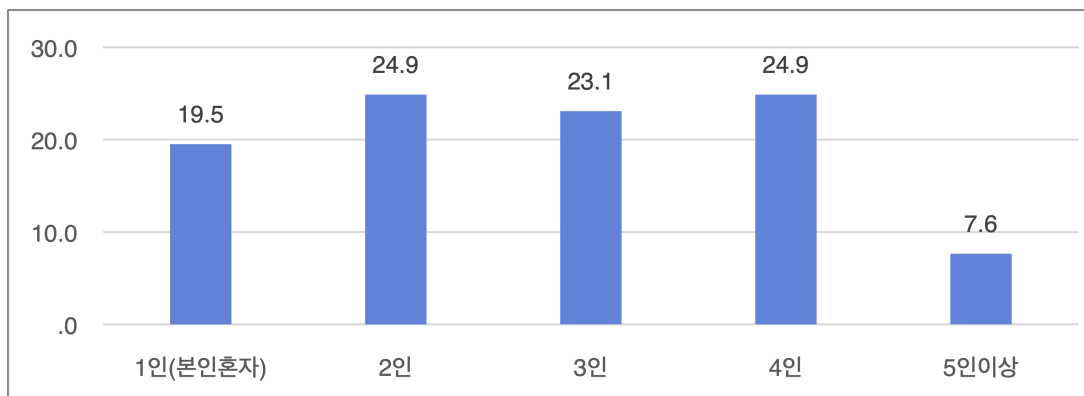


그림 8 가구 구성원

9) 정치성향

□ 응답자의 정치성향은 보수 21.6%, 중도 39.8%, 진보 38.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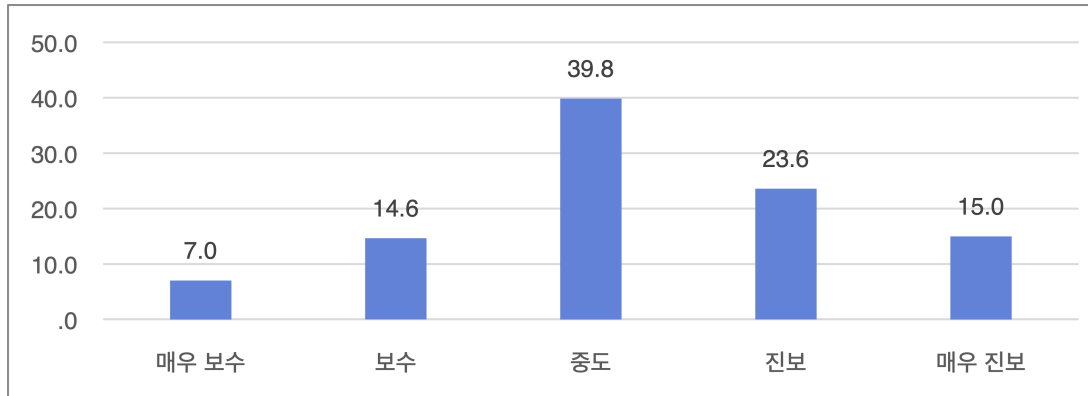


그림 9 정치성향

2. 지방자치제도 30주년에 대한 평가

1) 지방자치 30년 종합평가

- 지방자치 30년 종합평가에 대한 응답은 '긍정(긍정+매우긍정)' 42.6%, '보통'이 40.8%, '부정(부정+매우부정)'은 16.4%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부정평가(부정+매우부정)가 긍정평가(긍정+매우긍정)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보통 비중(40.8%)이 높다는 점은 응답자 다수가 지방자치에 대한 효능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가 생활환경의 변화, 참여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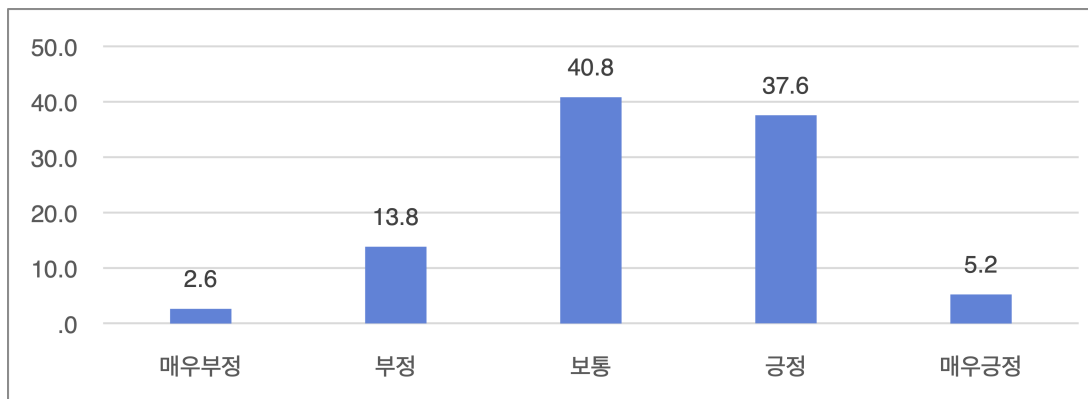


그림 10 지방자치 30년 종합평가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심도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심도에 대한 응답은 '관심있음'이 47.0%, '보통' 37.4%, '부정' 15.6%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도 또한 지방자치 30년 평가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매우 관심있다는 응답이 지방자치 30년 평가보다 높은 비율(9.8%)로 나타난 점은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수동적인 입장보다는 능동적인 입장에서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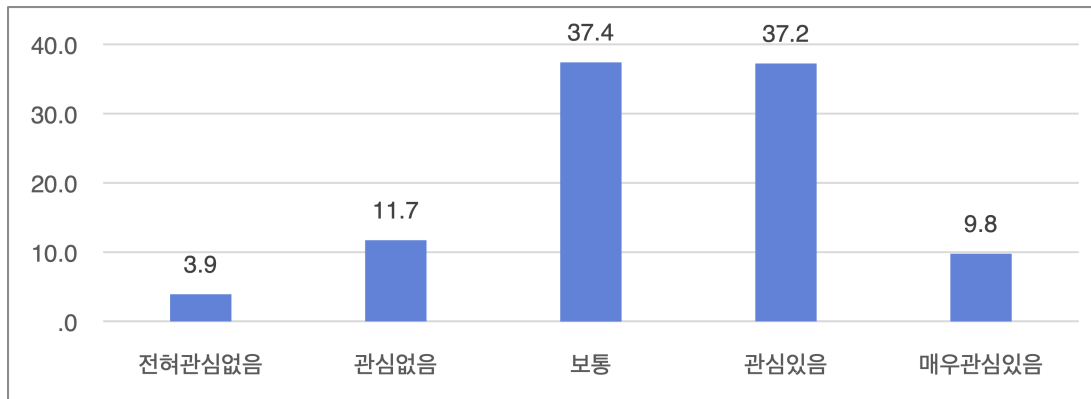


그림 11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관심도

3)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만족도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 48.1%, '만족(만족+매우만족)' 34.3%, '불만족(불만족+매우 불만족)' 22.6% 순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 30년 평가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관심과는 약간 다르게 '보통'이라고 응답자들이 많은 것은 관심은 있지만, 실제 체감 또는 효용을 느끼지 못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방자치가 주민의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체감하고 느끼게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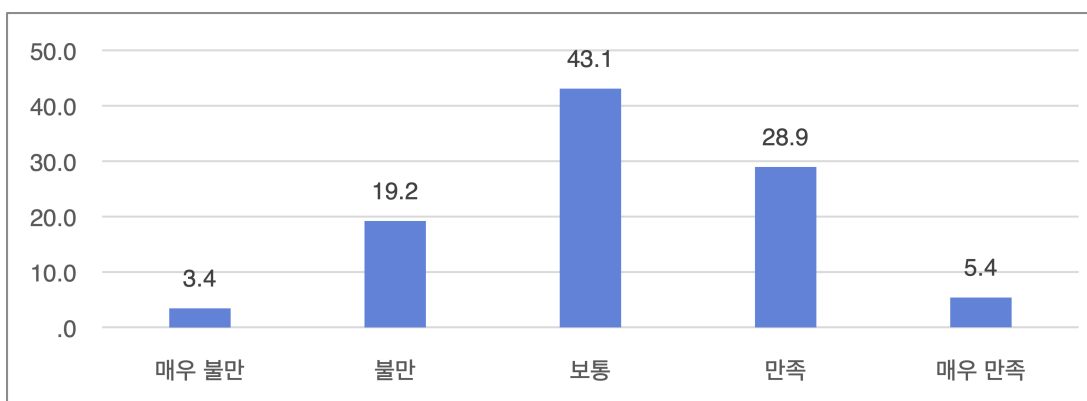


그림 1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만족도

4)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

-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은 '찬성(찬성+매우 찬성)' 59.1%, '보통' 31.2%, '반대(반대+매우 반대)' 9.8%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가치인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약 60%로 유보적 입장(보통) 약 31%와** 합치면 약 90% 이상이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과 시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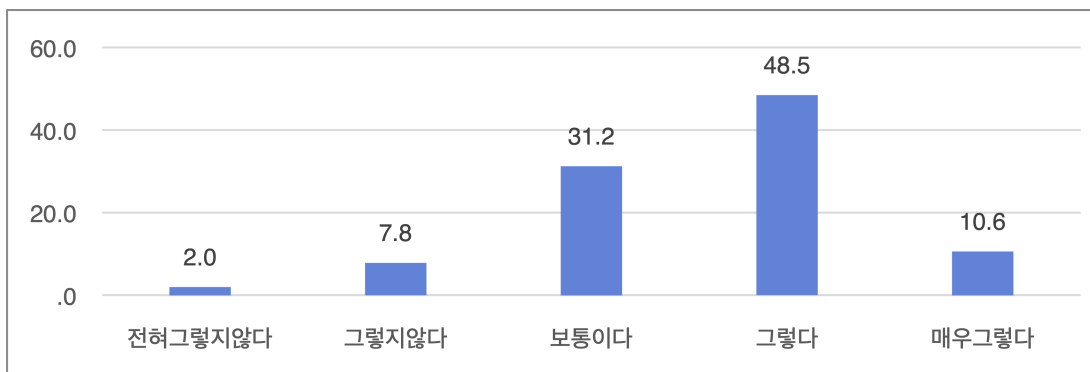


그림 13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

5)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여부

-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여부에 대한 응답은 '강화(그렇다+매우 그렇다)' 45.3% '변화 없음(보통이다)' 41.1%, '약화(그렇지않다+전혀 그렇지않다)'는 12.7%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입장과 같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응답자들은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방분권 강화와 효과적인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그 핵심 참여자로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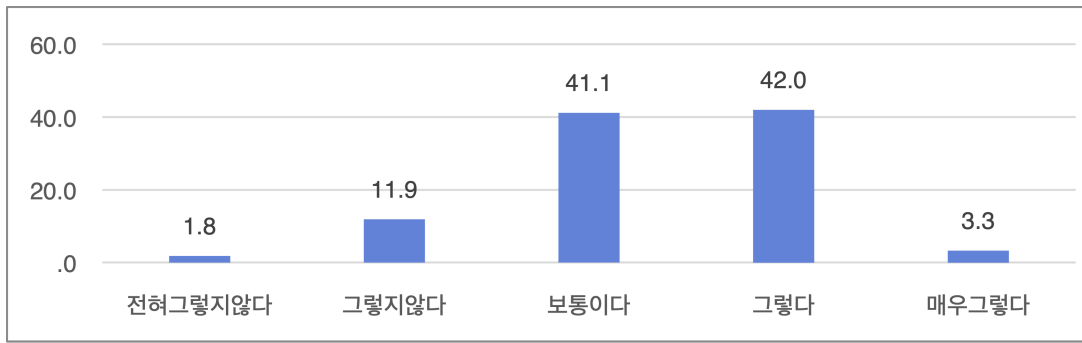


그림 14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관한 의견

6) 지방자치제 시행 후 성과평가

- 지방자치제 시행 후 분야별로 성과평가를 한 결과, 생활환경 및 도시관리 (도로·하수·주차 등 인프라, 공원녹지 등) 분야가 10점 만점에 6.21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문화·여가(평생학습, 청소년 활동, 도서관·공연·체육시설 등) 분야 6.20점, 복지 및 보건서비스(돌봄, 건강검진, 아동·노인복지, 보건소 서비스 등) 분야 6.11점,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공론장, 마을계획 등) 분야 5.78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전통시장,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 분야 5.75점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역주민의 복지와 환경, 그리고 문화적 차원에서 성과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했지만,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특히 지역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5개 분야 전체 평균 점수는 6.01점으로 성과평가를 긍정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방자치가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표 4 지방자치제 시행 후 5개 분야 성과평가

	응답자 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	615	1.00	10.00	6.11	1.75268
생활환경 및 도시관리 분야	615	1.00	10.00	6.21	1.67132
교육·문화·여가 분야	615	1.00	10.00	6.20	1.7314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분야	615	1.00	10.00	5.75	1.80410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615	1.00	10.00	5.78	1.75748
평균	615	1.00	10.00	6.01	

7) 지방자치제 시행 후 기여도 평가

(1) 본인 개인의 삶

-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본인 개인의 삶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보통이 48.3%, 긍정 29.4%, 부정이 22.2% 순으로 응답하였음
-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유사하게 지방자치제도 시행이 아직까지 본인의 개인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개인적인 삶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높이는 제도를 고안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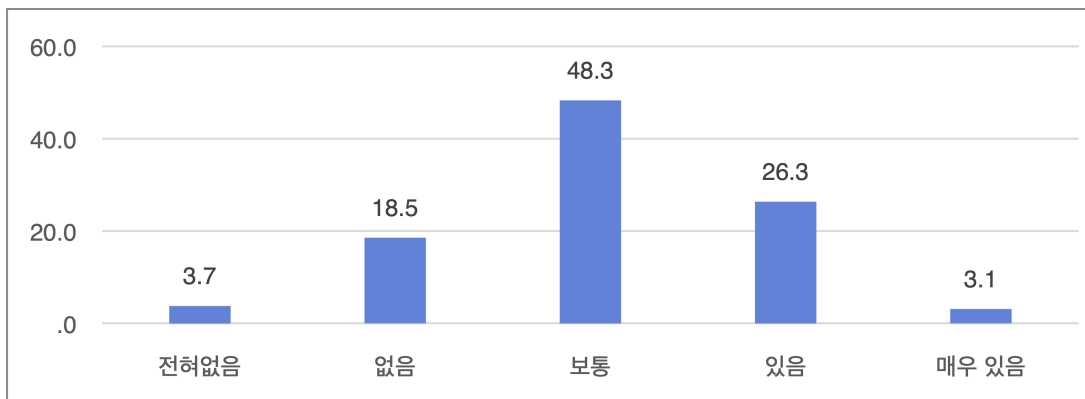


그림 15 지방자치제도가 본인 개인의 삶에 기여도 평가

(2) 지방자치분권

-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보통이 49.6%, 긍정 30.4%, 부정 20.0% 순으로 응답하였음
- 앞서 설문한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견에서 찬성의 입장이 약 60%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지방자치분권에는 강하게 기여하는 역할이 제한적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방자치분권은 지방자치제도의 효과적 설계와 운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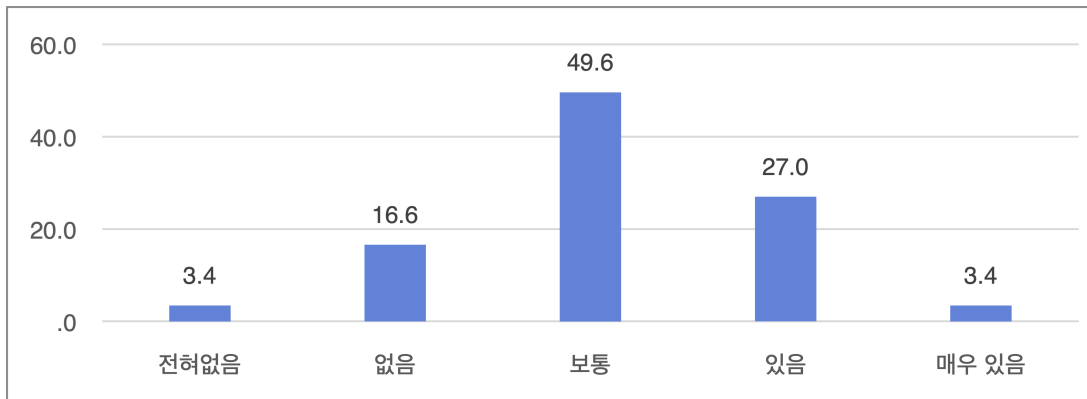


그림 16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분권에 기여도 평가

(3) 지역균형발전

-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보통이 45.9%, 긍정 32.5%, 부정 21.6% 순으로 나타났음
- 지방자치제 시행 후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기여도와 마찬가지로 **지역균형 발전에도** 지방자치제도가 의미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방자치제도의 끊임없는 개선과 시민과의 피드백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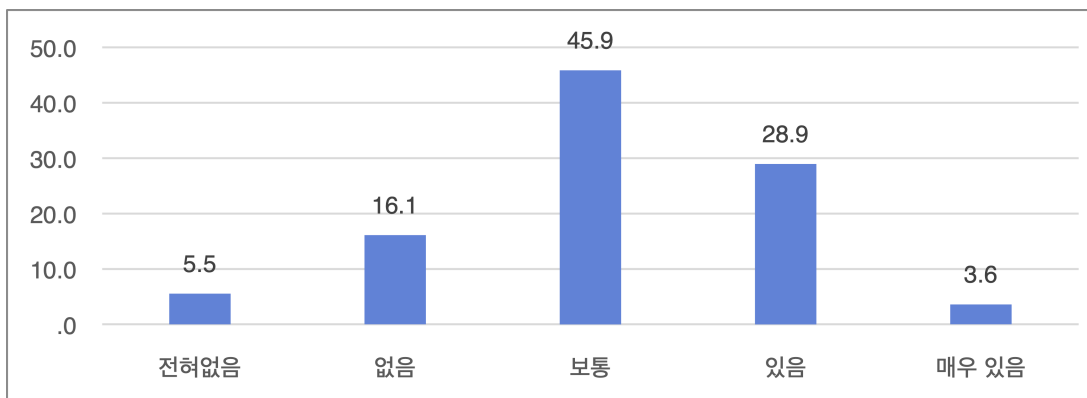


그림 17 지방자치제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도 평가

(4) 한국민주주의

- 지방자치제도 시행 후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는 긍정이 43.0%, 보통 39.2%, 부정이 27.9% 순으로 응답하였음
- 앞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아직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는 결과와 달리,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사료됨.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 지방자치제도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제도야말로 한국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제도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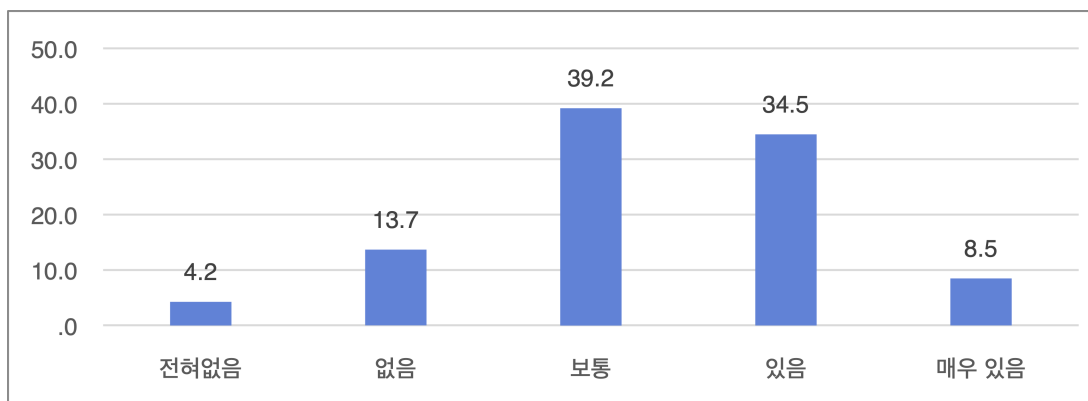


그림 18 지방자치제도가 한국민주주의에 기여도 평가

■ 지방자치제 기여도 평가 분석

- 지방자치제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응답 중 긍정평가는 한국민주주의(43.0%), 지역균형발전(32.5%), 지방자치분권(30.4%), 본인 개인의 삶(29.4%) 순으로 나타난 바, 향후 지방자치제도는 한국민주주의를 견인하는 역할을 넘어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효능감있는 **제도의 발전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 반면에 지방자치제 기여도 평가에 대한 응답 중 부정평가는 한국민주주의(27.9%), 본인개인의 삶(22.2%), 지역균형발전(21.6%), 지방자치분권 (20.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민주주의가 지방자치제도로 모두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특히 본인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입장이 두드러진 것은 지방자치제도가 개인의 삶과 무관하게 운영되어서는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담보할 수 없음을 의미함

3.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

1)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인지도

(1)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인지도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음 77.7%, 참여경험 있음(적극 참여 포함)이 11.7%, 전혀 모른다 10.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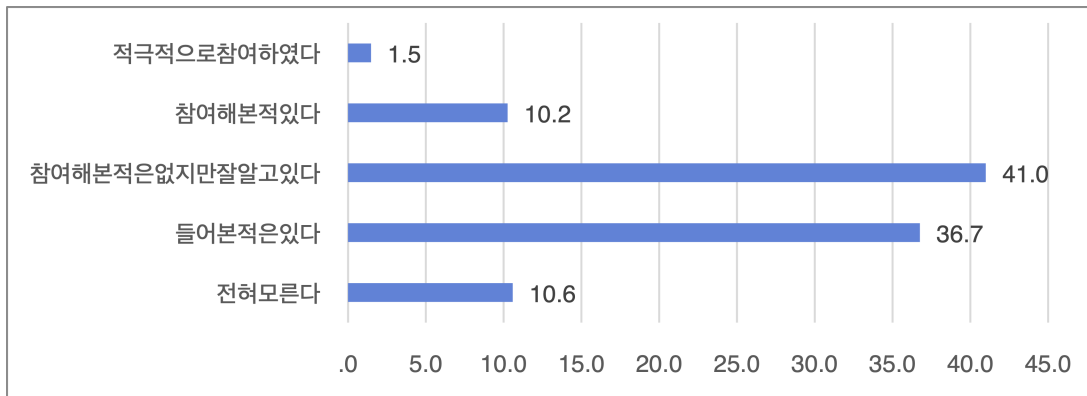


그림 19 주민참여예산제 인지 및 참여경험

(2) 주민조례 발안제도

-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인지도 중에서 주민조례 발안제도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음 73.7%, 전혀 모른다 18.4%, 참여경험 있음이 8.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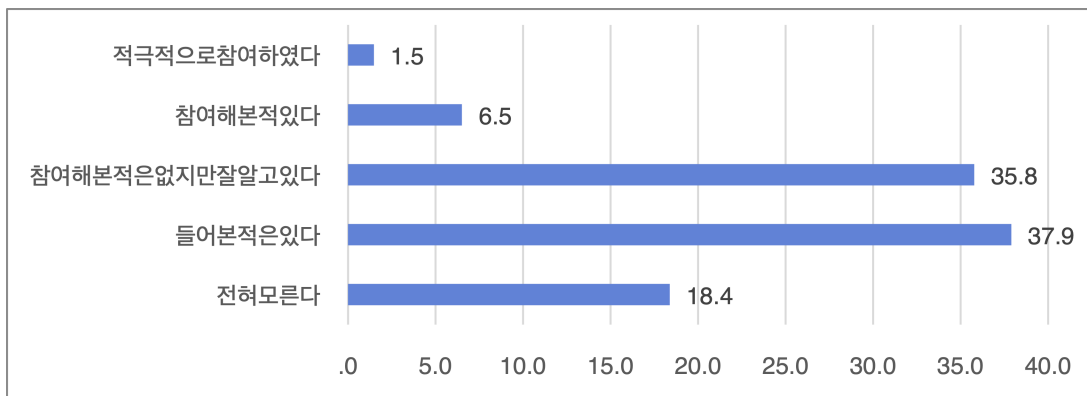


그림 20 주민조례발안제도 인지 및 참여경험

(3) 주민감사제도

-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인지도 중에서 주민감사제도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음 75.0%, 전혀 모른다 18.5%, 참여경험 있음 6.5%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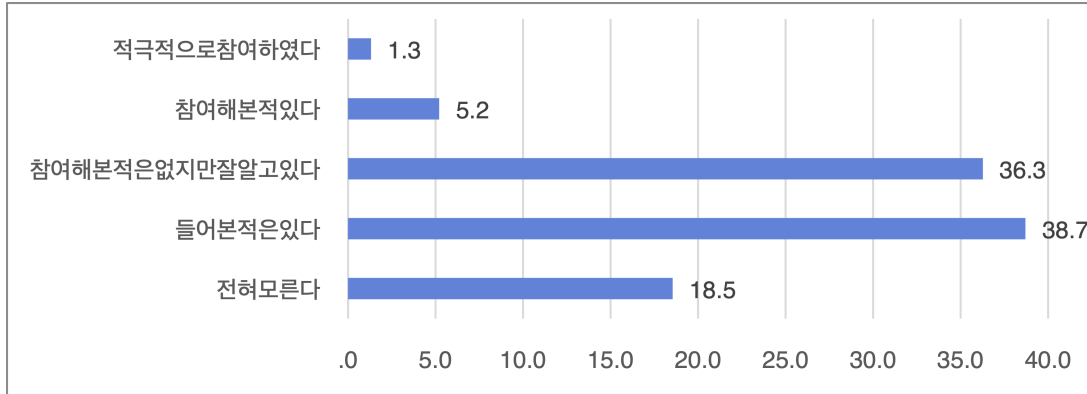


그림 21 주민감사제도 인지 및 참여경험

(4) 주민자치회

-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인지도 중에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응답은 알고 있음 81.9%, 참여경험 있음 9.6%, 전혀 모른다 8.5%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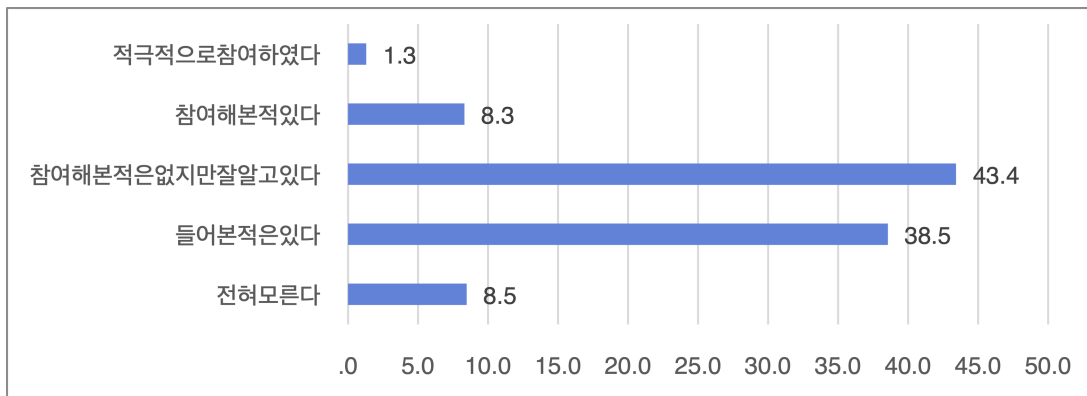


그림 22 주민자치회 인지 및 참여경험

2)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설문한 결과, 주민자치회가 5.7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 5.73점, 주민감사제 5.71점, 주민조례발안제도 5.65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홍보와 실천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또한 전국적인 홍보와 주민의 참여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주민감사제도와 주민조례 발안제도는 그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낮은 영향력을 가졌다고 인식하는 결과임
- 무엇보다, 전체평균이 10점 만점에 5.72는 주민참여제도가 아직까지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함. **따라서** 이들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5 주민참여제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 인식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주민참여예산제	615	1	10	5.73	1.822
주민조례 발안제도	615	1	10	5.65	1.766
주민감사제	615	1	10	5.71	1.860
주민자치회	615	1	10	5.79	1.837
전체평균	615	1	10	5.72	

3) 활성화되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

- 활성화되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주민감사제도 32.0%, 주민참여예산제 30.9%, 주민자치회 21.6%, 주민조례발안제도 15.4% 순으로 지적하였음
- 주민감사제도는 앞서 분석한 정책결정에 영향력은 낮게 인식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통제와 참여가 필요한 분야가 감사분야라고 인식한 결과라고 사료됨. 따라서 옴부즈만과 같은 주민감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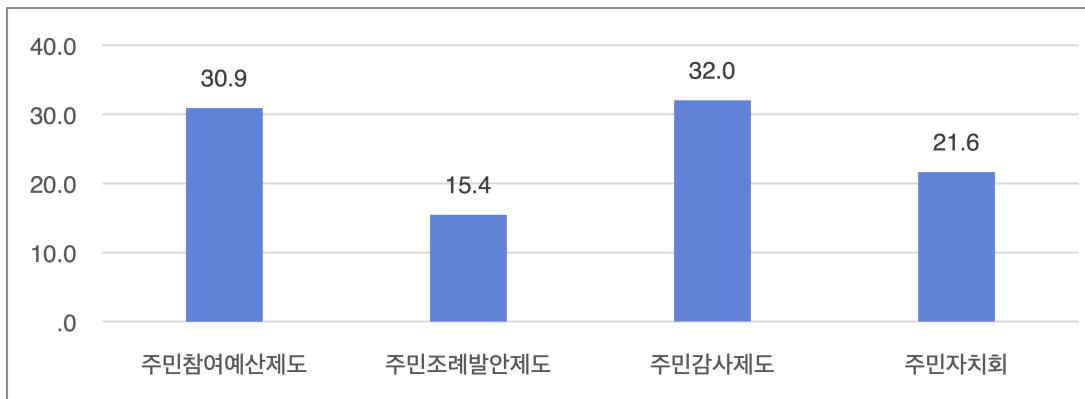


그림 23 활성화 되어야 하는 주민참여제도

■ 주민참여제도와 주민자치에 관한 의견 분석

- 주민자치회(81%), 주민참여예산제(77%), 주민감사제도(75%) 주민조례발안제도(73%)등 주민참여제도는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참여 경험은 한 자릿수에 불과함. 주민감사제도와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제도 특성상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는 일상적 제도임에도 참여경험이 낮음
-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의 정책 결정 영향에 대한 평가도 부정보다 긍정이 높은 점과 활성화 의견을 감안하면 주민참여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4개 기관(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의회, 자치구, 자치구의회) 중에서 자치구(구청장포함)에 대한 평가 높았음(5점 만점에 2.83점). 그 다음으로 자치구의회 2.70점, 대전광역시청 2.63점, 대전광역시의회 2.61점 순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와 자치구 단위에서 더 많은 참여와 영향을 주고 받고 있음을 시사함. 따라서 더욱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가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이 필요함
- 다만 5점 만점 중 전체평균은 2.70점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방자치제도가 광역단위, 기초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전광역시청(시장 포함)	615	1	5	2.63	.933
대전광역시의회	615	1	5	2.61	.927
자치구(구청장 포함)	615	1	5	2.83	.931
자치구의회	615	1	5	2.71	.935
전체평균	615	1	10	2.70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의견 분석

- 지방자치제체(장)의 주민의견 수렴 정도에 대한 응답 중 긍정평가는 자치구(21.3%), 자치구의회(18.1%), 대전광역시(15.2%), 대전광역시의회(14.6%)순임
- 지방자치제체(장)의 주민의견 수렴 정도에 대한 응답 중 부정평가는 대전광역시의회(41.3%), 대전광역시청(39.6%), 자치구의회(37.2%), 자치구(32.1%) 순임
- 자치구/의회가 대전광역시/의회보다 긍정평가가 높음. 이는 주민의 접근성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음. 더불어 집행부(시청,구청)가 의회(시의회, 구의회)보다 긍정평가가 높음
- 전반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5배에서 3배까지 높은 점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임

4. 시민사회단체 평가와 공동체 인식

1)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 대전지역 시민사회(NGO) 2.6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청(시장포함) 2.62점, 대전광역시의회 2.55점 순으로 나타났음
- 무엇보다 이 세 주체가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높지 않으므로 대전광역시와 대전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으로 지역사회를 주도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뒷받침될 때 신뢰도는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7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대전지역 시민사회(NGO)	615	1	5	2.69	.986
대전광역시청(시장포함)	615	1	5	2.62	.970
대전광역시의회	615	1	5	2.55	.931
전체평균	615	1	5	2.62	

2)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의견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의견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51.1%, 부정 32.8%, 긍정 16.1% 순으로 나타났음
- 이는 앞서 분석된 신뢰도에서 시민사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시민사회만 별도로 보았을 때 주민의견 수렴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지방자치제도 운영과 참여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와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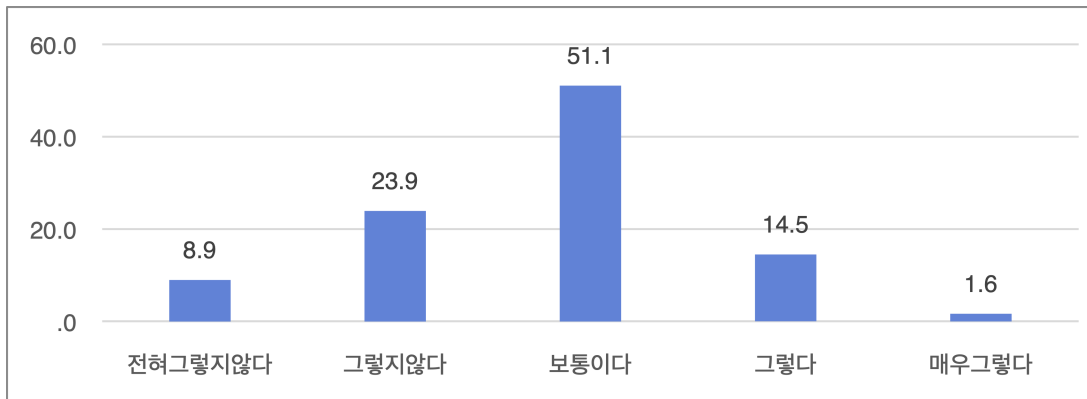


그림 24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주민 의견수렴 정도

3)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지역사회 기여도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보통 45.0%, 갈등을 유발한다는 응답 31.0%, 지역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23.9%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대전지역의 시민사회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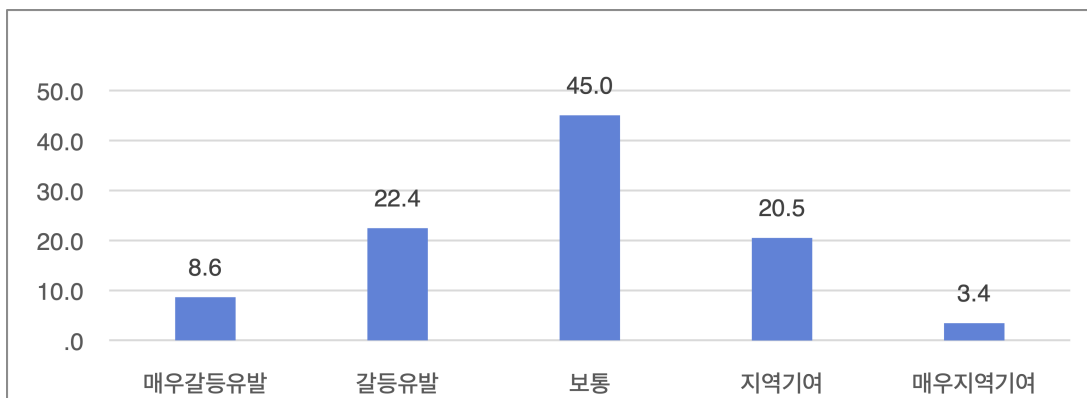


그림 25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의 지역사회 기여도

4) 공동체 의식 조사

(1) 대전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

□ 대전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에 대한 응답은 소속감에 유보적 입장인 보통이 41.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속감을 느낀다는 긍정적인 응답 33.8%, 부정적인 입장 25.2%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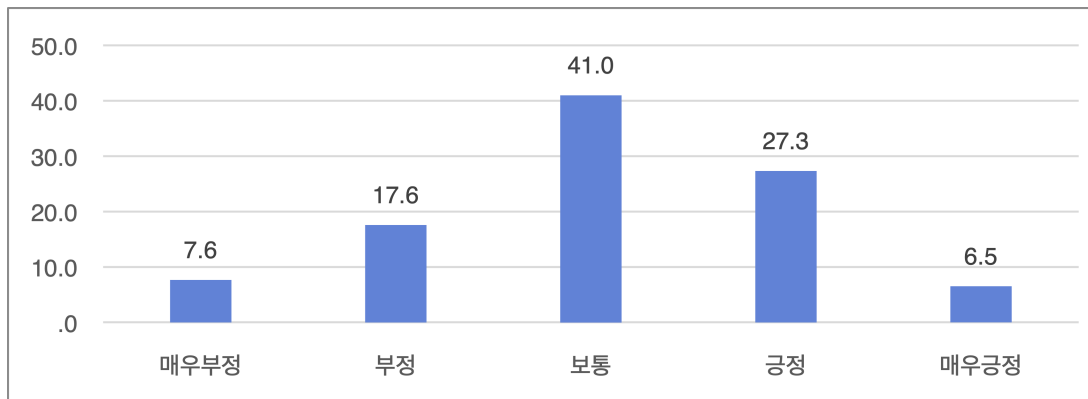


그림 26 대전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

(2) 대전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의견

□ 대전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보통이 49.1%, 부정이 29.1%, 긍정이 21.5% 순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대전지역시민사회의 신뢰와 의견수렴 정도와 유사한 **결과로** 대전 시민간 연대와 협력에 신뢰와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와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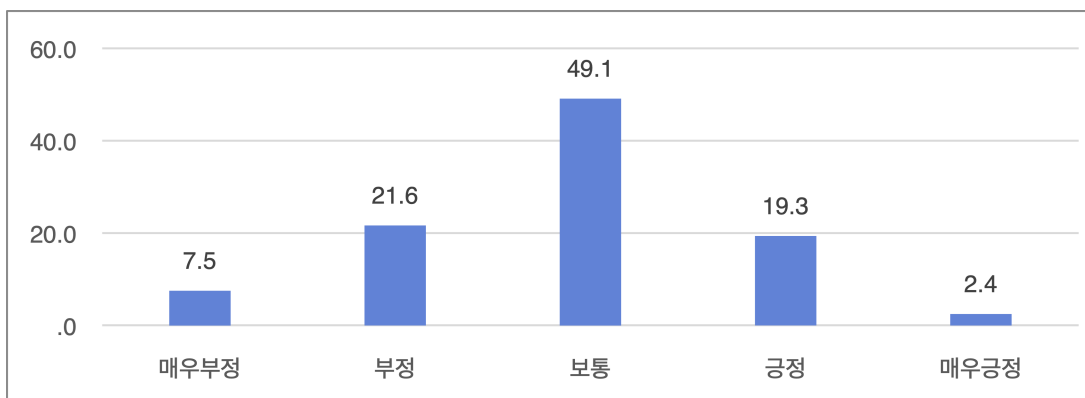


그림 27 대전시민간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의견

(3) 대전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위기 대응)에 관한 의견

□ 대전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위기 대응)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들은 앞서 분석한 대전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에 대한 입장과 유사하게 보통이 48.1%, 부정적 의견 27.6%, 긍정적 의견 24.3%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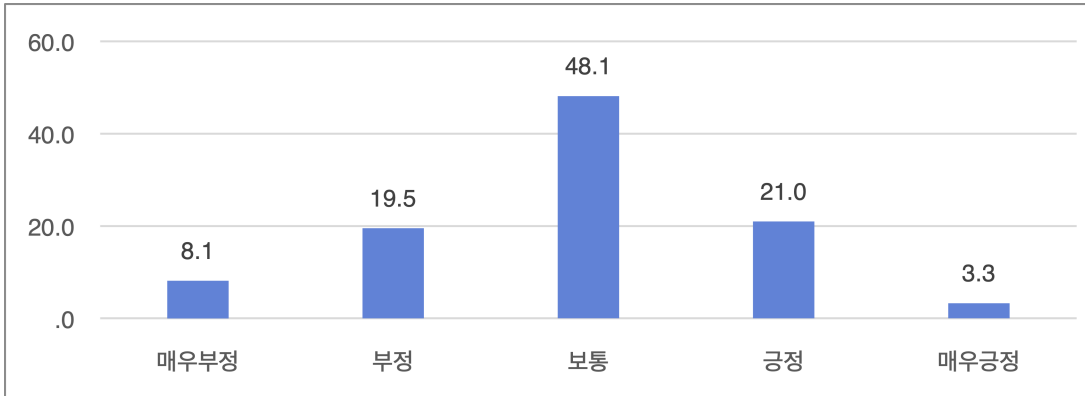


그림 28 대전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위기대응)에 관한 의견

5)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우선순위(2개까지 응답)

□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2개까지 응답)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현재 거주 중인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18.2%), 직장, 학교, 마을 등 오프라인 커뮤니티(17.2%), 대전광역시 전체(13.7%), 거주지 행정동(13.2%),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없음(11.7%), 온라인커뮤니티(10.7%)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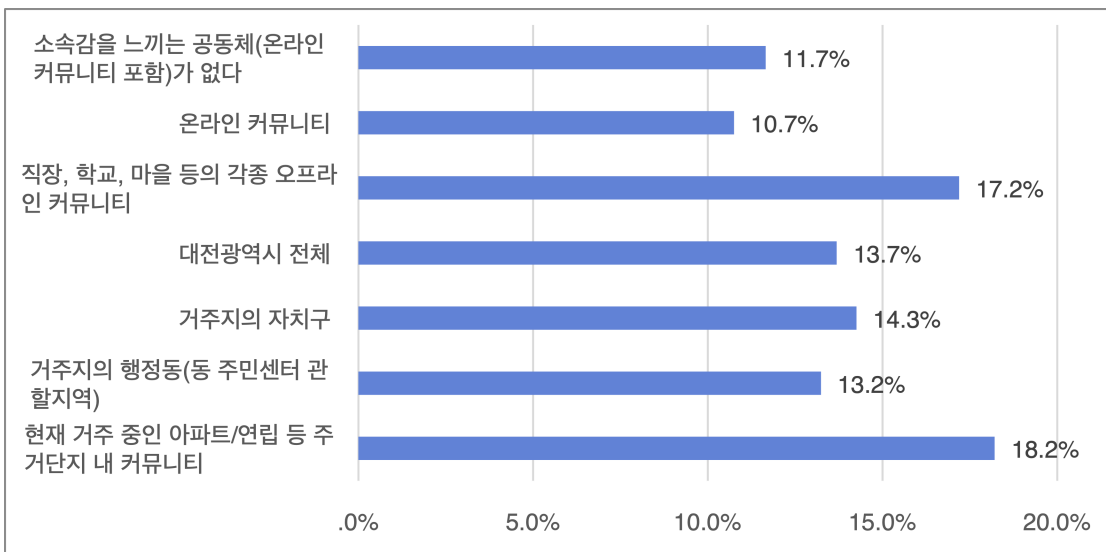


그림 29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우선순위(2개까지 응답)

6)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 한국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7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통 21.1%, 심각하지 않음 7.6% 순으로 응답하였음. 이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지적되는 정치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응답자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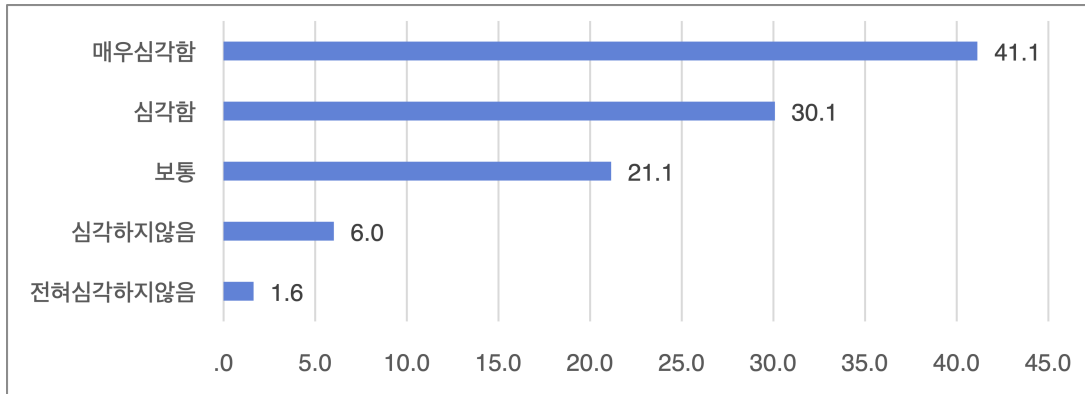


그림 30 한국사회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7) 대전지역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 대전지역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은 심각하다는 의견이 56.9% 가장 높았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정치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 인식(71.2%) 보다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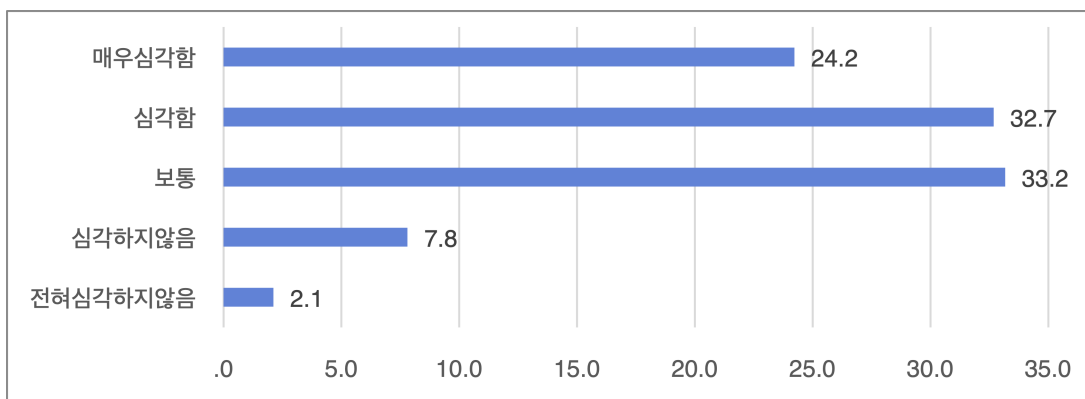


그림 31 대전지역 정치적 양극화에 대한 의견

8)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수용도

□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수용도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들은 **수용할 수 있다** 43.9%, 보통 42.1%, 수용할 수 없음 13.1% 순으로 나타났음. 이는 정치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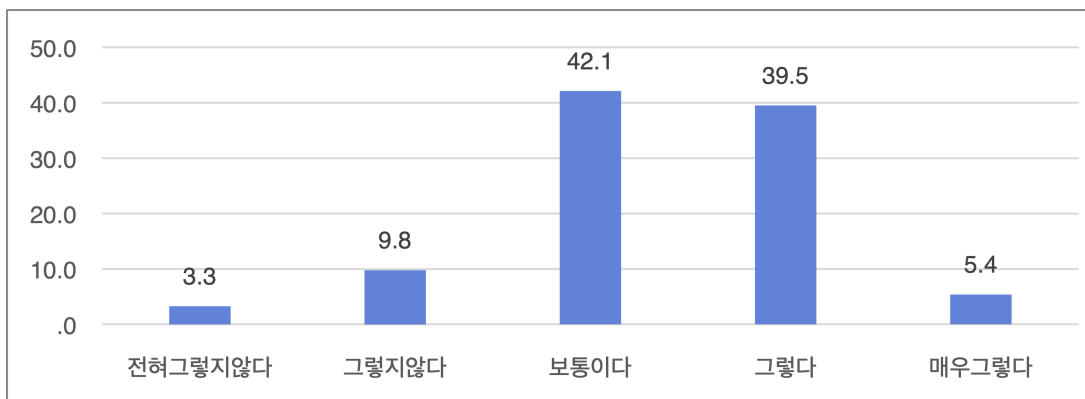


그림 32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지역사회에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견

9) 대전지역 주체간 갈등에 대한 의견

- 대전지역 주체간 갈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10점 만점에 6.14점으로 가장 심각하게 인식했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갈등 6.08점, 지방의회와 시민사회의 갈등 5.99점, 시민사회 내의 갈등 5.81점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대전지역사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큰 권한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됨. 따라서 **집행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표 8 대전지역 주체간 갈등에 대한 의견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치단체장 vs 지방의회의	615	1	10	6.08	1.763
자치단체장 vs 시민사회	615	1	10	6.14	1.695
지방의회 vs 시민사회	615	1	10	5.99	1.704
시민사회 내	615	1	10	5.81	1.642
전체평균	615	1	10	6.01	

10)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구청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구청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한 응답은, 청렴성 및 도덕성(36.9%), 정책공약비전(34.8%), 지역사회기여도(18.0%), 정당(5.7%), 개인적 호감도(3.7%), 기타(0.8%) 순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최근 공정성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들의 특성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 응답자들이 소속정당이나 개인적 호감도 보다 정책공약비전이나 지역사회기여도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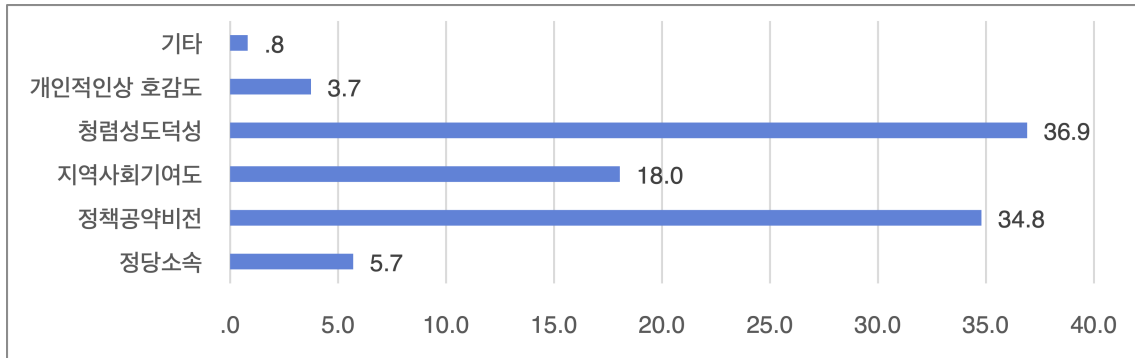


그림 33 지방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

5. 대전시민 집단별 인식의 차이

1) 자치구 거주지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은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긍정+매우 긍정)가 42.8%, 부정적 평가 16.4%로 나타났음
- 자치구 거주지별 평가를 보면, 긍정적 평가는 유성구 48.4%, 중구 47.5%, 동구 45.1%, 대덕구 40.9%, 서구 36.2% 순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평가는 서구 19.2%, 동구 17.1%, 대덕구 16.7%, 중구 16.2%, 유성구 12.3% 순으로 나타났음

표 9 자치구 거주지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지방자치30년평가_5점					전체
		매우부정	부정	보통	긍정	매우긍정	
동구	빈도	1	13	31	29	8	82
	%	1.2%	15.9%	37.8%	35.4%	9.8%	100.0%
중구	빈도	4	12	36	42	5	99
	%	4.0%	12.1%	36.4%	42.4%	5.1%	100.0%
서구	빈도	8	33	95	72	5	213
	%	3.8%	15.5%	44.6%	33.8%	2.3%	100.0%
유성구	빈도	2	17	61	69	6	155
	%	1.3%	11.0%	39.4%	44.5%	3.9%	100.0%
대덕구	빈도	1	10	28	19	8	66
	%	1.5%	15.2%	42.4%	28.8%	12.1%	100.0%
	빈도	16	85	251	231	32	615
	%	2.6%	13.8%	40.8%	37.6%	5.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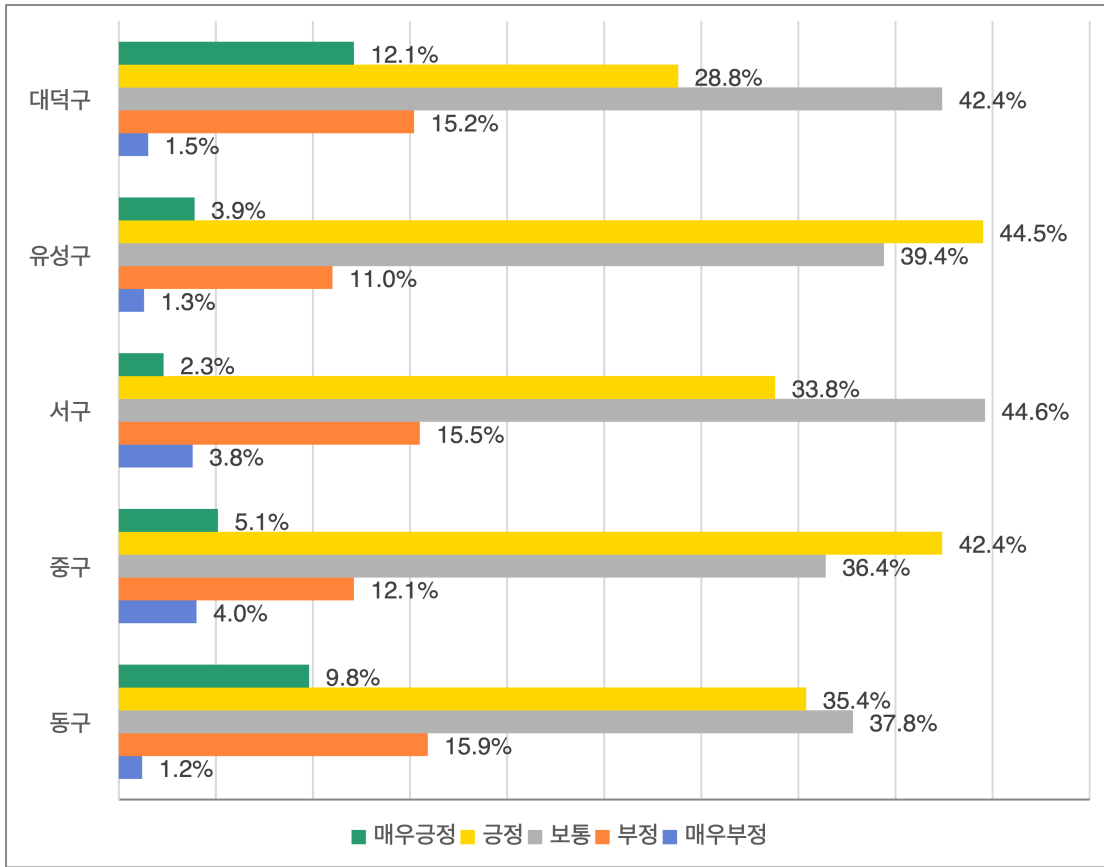


그림 34 자치구 거주자별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2)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제도 경험의 정도와 지방자치의 부문별 성과평가, 지방자치 30년 **총평가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음
- ※ 지방자치참여경험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조례 발안제도, 주민감사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 및 참여여부를 질문한 문항을 **평균으로** 변수화하였음
- 그 결과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부문은 주민자치참여역량이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0.253으로 나타났음
- 아울러, 전체 **부문 중에서는** 주민자치참여역량과 지역경제일자리 부문이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0.726점으로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주민자치의 역량이 지방자치제도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대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어야 보다 **원활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사료됨
- 이는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 가능성을 보여줌

표 10 지방자치제 참여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지방자치 제도 참여경험	성과평가 보건복지	성과평가 생활환경 도시관리	성과평가 교육문화 여가	성과평가 지역경제 일자리	성과평가 주민자치 참여역량	지방자치 30년 평가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 .000 615						
성과평가_보건 복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25** .000 615	1 615					
성과평가_생활 환경도시관리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11** .000 615	.696** .000 615	1 615				
성과평가_교육 문화여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82** .000 615	.679** .000 615	.708** .000 615	1 615			
성과평가_지역 경제일자리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08** .000 615	.586** .000 615	.622** .000 615	.679** .000 615	1 615		
성과평가_주민 자치참여역량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53** .000 615	.583** .000 615	.587** .000 615	.636** .000 615	.726** .000 615	1 615	
지방자치 30년 평가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65** .000 615	.510** .000 615	.487** .000 615	.475** .000 615	.459** .000 615	.437** .000 615	1 615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3)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온 부문은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생활환경 및 도시관리 부문이 0.4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역경제 일자리 부문이 0.387점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소속감은 시민의 생활수준에서 안정성과 경제적 뒷받침이 될수록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함

표 11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대전시민 공동체 소속감	성과평가 보건복지	성과평가 생활환경 도시관리	성과평가 교육문화 여가	성과평가 지역경제 일자리	성과평가 주민자치 참여역량	지방자치 30년 평가
대전시민 공동체 소속감	Pearson 상관계수	1	.445**	.468**	.445**	.449**	.447**	.42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N	615	615	615	615	615	615	615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4)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

- 대전시민의 공동체 소속감과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0.342점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동체 소속감과 제도 참여 경험 간의 유의한 상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제도적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이는 단순히 참여할 권리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이 주민 자치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토대가 됨을 의미함
- 따라서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강화와 더불어, 공동체 소속감을 높이는 생활·문화 기반 정책(예: 마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생활권 단위 프로그램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나아가 공동체 소속감이 높은 시민들이 제도 참여의 주체로 나설수록, 지방자치가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함

표 12 대전시민의 공동체소속감과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

		대전시민 공동체 소속감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
대전시민 공동체 소속감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 615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342** .000 615	1 615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5)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가장 상관성이 높게 나온 부문은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지역경제 일자리 부문 0.392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 30년 총평가 부문이 0.387점으로 나타났음
- 이러한 결과는 신뢰가 확보될수록 지역경제와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강화됨을 의미함
- 아울러 대전시민사회에 대한 신뢰가 안정적인 지역경제 조건과 맞물려 작동할 때 시너지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하고,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임

표 13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에 대한 성과평가의 관계

		대전시민 사회 신뢰도	성과평가 보건복지	성과평가 생활환경 도시관리	성과평가 교육문화 여가	성과평가 지역경제 일자리	성과평가 주민자치 참여역량	지방자치 30년 평가
대전시민사회 신뢰도	Pearson 상관계수	1	.363**	.327**	.323**	.392**	.376**	.38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N	615	615	615	615	615	615	615

**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6)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

-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제도 참여 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전시민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지방자치제도 참여는 통계적 유의수준 $p < 0.01$ 에서 0.225점으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대전시민사회 신뢰도와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의 관계

		대전시민사회 신뢰도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
대전시민사회 신뢰도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1 .000 615	
지방자치제도 참여경험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양쪽) N	.225** .000 615	1 615

** 상관계수는 0.01 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 대전지역사회는 시민사회의 신뢰와 주민자치 역량이 지방자치 성과의 핵심 요인이며, 특히 지역경제 및 일자리 성과와 직결되어, 경제적 기반 강화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가 동반되어야 함.
-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대전시민은 “경제적 안정 + 주민자치 실질화” 라는 두 축에서 평가하고 있음.
- 향후 과제는 주민자치 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 시민사회와 행정 간 신뢰의 제도화, 지역경제와 연결된 참여모델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부록.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평가 설문

안녕하십니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민사회연구소입니다.
저희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30주년 평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약 3분 정도의 간단한 조사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의견은 지방자치 연구자료로 활용하게 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으로 맞고 틀리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함께 단지 '어떤 것이 몇 %'라는 집계에만 사용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인구통계학적 질문

1. 귀하의 대전광역시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약 년)
2.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은 어디십니까?
① 동구 ② 중구 ③ 서구 ④ 유성구 ⑤ 대덕구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자 ② 남자
4.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년생)
5.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6. 귀하의 가구 월평균 수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699만원 ⑧ 700만원 이상

7. 귀하의 가구 총 자산은 어떻게 되십니까?(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모두 포함)

- ① 5천만원 미만 ② 5천만원~1억원 미만 ③ 1억원~3억원 미만
- ④ 3억원~5억원 미만 ⑤ 5억원~7억원 미만 ⑥ 7억원~9억원 미만
- ⑦ 9억원 이상

8. 귀하는 몇 인 가구(본인포함)에서 생활하십니까?

- ① 1인(본인 혼자) ② 2인 ③ 3인 ④ 4인 ⑤ 5인 이상

9. 귀하의 정치적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적					진보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II. 지방자치제도 30주년에 대한 평가

10. 본격 시행한 지 올해로 30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	---	---	---	---	---	---	---	---

11. 귀하는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매우 긍정				
나는 지방자치제도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나는 지방자치제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귀하는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4. 귀하는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다음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다 ←————→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복지 및 보건서비스 (돌봄, 건강검진, 아동·노인복지, 보건소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생활환경 및 도시관리 (도로·하수·주차 등 인프라, 공원녹지, 주거환경, 도시재생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교육·문화·여가 (평생학습, 청소년 활동, 도서관·공연·체육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전통시장, 창업지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민참여 및 자치역량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시민공론장, 마을계획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귀하는 지방자치제 시행이 다음의 분야에서 얼마나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							매우 기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귀하 개인의 삶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방자치분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역균형발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한국의 민주주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Ⅲ. 참여제도와 주민자치

16. 귀하는 다음의 주민참여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전혀모른다	들어본적은 있다	참여경험은 없지만 잘알고 있다	참여해본 적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①	②	③	④	⑤
주민조례발안제도	①	②	③	④	⑤
주민감사제도	①	②	③	④	⑤
주민자치회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는 다음의 주민참여제도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5점)

	매우 부정 ←					매우 긍정				
주민참여예산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민조례발안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민감사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주민자치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8. 귀하는 대전에서 어떤 주민참여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주민참여 예산제도 ② 주민조례 발안제도 ③ 주민감사제도 ④ 주민자치회

19. 귀하는 다음 보기의 기관들이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			매우 잘 반영한다 →	
대전광역시청(시장 포함)	①	②	③	④	⑤
대전광역시의회(광역의회)	①	②	③	④	⑤
거주하는 구청(구청장 포함)	①	②	③	④	⑤
거주하는 구의회(기초의회)	①	②	③	④	⑤

IV. 시민사회단체 평가와 공동체 인식

20. 귀하는 다음의 보기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매우 신뢰한다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	①	②	③	④	⑤
대전광역시청(시장 포함)	①	②	③	④	⑤
대전광역시의회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가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2. 귀하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가 갈등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유발 ←					지역사회기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3. 귀하는 다음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정					매우 긍정				
대전 주민으로서 공동체 소속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대전 시민 간의 연대와 협력이 잘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대전 지역 공동체의 회복력(위기 대응)은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4. 다음 중 귀하가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2개까지 응답 가능)

- 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연립 등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 ② 거주지의 행정동(동 주민센터 관할지역)
- ③ 거주지의 자치구(예: 서구, 유성구 등)
- ④ 대전광역시 전체
- ⑤ 직장, 학교, 마을 등의 각종 오프라인 커뮤니티
- ⑥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SNS, 지역 기반 온라인 모임 등)
- ⑦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온라인 커뮤니티 포함)가 없다
- ⑧ 기타 (직접 작성):

25. 귀하는 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음					매우 심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6. 귀하는 대전 지역의 정치적 양극화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음					매우 심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7. 귀하는 다음 진술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8. 귀하는 다음의 대전지역 주체간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하지 않음 ←					→ 매우 심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치단체장 vs. 지방의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자치단체장 vs 시민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지방의회 vs 시민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시민사회 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9. 지방의회 의원이나 시장·구청장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정당 소속
- ② 정책 공약과 비전
- ③ 지역사회 참여도
- ④ 청렴성과 도덕성
- ⑤ 개인적 인상이나 호감도
- ⑥ 기타 (직접 작성):